

비상계엄 헌정질서파괴 윤석열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7
----------	-------------

발의연월일 : 2024. 12. 12.

발 의 자 : 정재환, 문희성, 이명녀,
안영호

1. 주 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내란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일상과 국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 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조치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및 국회 봉쇄는 내란죄에 해당함.
- 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
- 마.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 촉구함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전국도시구군의회의장

4. 결의문(안) : 붙임

비상계엄 헌정질서파괴

윤석열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평온하고 자유롭던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일
상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고 명시 되어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 국가 상황이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
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위헌
적이고 위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
차도 무시한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다.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
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
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
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
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한다.

다행히도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과 현명한 판단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비운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훼손하였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아울러, 헌정 중단과 국정 마비를 핑계로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책임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탄핵 절차에 응하라!

하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내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